
기자간담회 자료

2018. 3. 14.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I. 금융혁신 추진실적 및 3월중 추진계획 / 1 |
| II. 구조조정 현안기업 관련 / 6 |
| III.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대한 입장 / 8 |
| IV.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점검계획 / 10 |

금 융 위 원 회

I. 금융혁신 추진실적 및 3월중 추진계획

1. 추진경과 및 실적

- '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' 구현을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「금융혁신 추진방향」을 1.15일 발표
 - 금융혁신은 금융 쇄신·생산적 금융·포용적 금융·경쟁 촉진 등 4대 전략·11대 분야 하에 31개 핵심과제로 구성
- 1~2월중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,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등 11개 금융혁신 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·후속조치 추진중(☞참고)

2. 3월중(잠정) 발표 예정인 금융혁신 과제

◆ 3월에도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속히 제고할 수 있도록 11개 과제의 세부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

- ① 우선, 금융부문 신뢰 제고를 위한 「금융 쇄신」 분야의 경우,
 - 3.15일 전문가 간담회(금융위원장 주재) 등을 거쳐 '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'을 발표하고,
 - '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' 및 '회계개혁법 개정 후속조치'를 마련할 계획(5주차)

[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(예시)]

- (CEO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) 금융회사 CEO 후보자 자격기준을 내실화하고 후보군 관리현황을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 제고
- (사외이사·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)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
- (보수 책임성 강화) 금융권 고액연봉 임직원에 대한 보수공시 강화 등 보수 책임성 강화
- (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) 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대상자의 범위와 심사요건을 재정비 하는 등 심사제도 내실화

② 어제(3.13일)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연대보증 폐지방안의 차질없는 추진, 성장지원펀드와 보증·대출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,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방안 추진 등

-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 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셨음
- 금융위는 우리경제의 혁신성장 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「생산적 금융」 관련 핵심과제들을 3월중 집중 추진할 계획
- 기 발표(3.8일)한 ‘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’은 4.2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
- 향후 3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‘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’ 및 20조원 규모의 ‘보증·대출프로그램 연계운영방안’(5주차)과
-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하는 ‘동산금융 활성화방안’(잠정 5주차)도 발표할 예정

[동산금융 활성화방안 (예시)]

- (동산의 일반담보화) 동산도 부동산과 같이 일반적 담보자산으로 활용 가능 하도록 개선
- (인프라 조성) 동산전문 평가체계 마련, 금융권 전문 동산매각시장 육성 등 ‘평가-관리-회수’ 제도를 보완하여 안정적 담보운영 기반 조성
- (인센티브 부여)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해 정책금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동산담보 활용유인을 제고

③ 서민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「포용적 금융」의 경우,

- 제대후 청년병사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‘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’(잠정 5주차, 국방부 등)을 발표할 예정

④ 우리 금융산업의 「경쟁 촉진」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,

- 3.6일 금융 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‘금융혁신지원 특별법’이 의원 발의되었으며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
- ‘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’(3.19일), ‘핀테크 활성화 로드맵’(4주차) 및 ‘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’(5주차)도 마련할 예정

[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(예시)]

- (데이터 활용여건 개선) 빅데이터 분석·이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금융권 표준 DB 및 분석인프라 마련 등 데이터 활용여건 개선
- (신용정보산업 진입규제 완화) 대표적인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인 신용정보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과 혁신 촉진
- (데이터 기반 핀테크 활성화) ‘본인 신용정보관리업’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·제도적 기반 마련
- (정보보호 내실화)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,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 금융권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노력도 배가

	주요 발표과제	후속조치 진행상황
1	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(1.11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코스피·코스닥 통합지수 출시(2.5일) · 코스닥 벤처펀드 도입을 위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(2.13일) · 코스닥위원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거래소 정관 개정(2.21일)
2	최고금리 인하 관련 보완방안(1.11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불법사금융 범부처 일제단속(2.1~4.30일) · '18~20년간 안전망 대출 공급(특례보증, 2.8일~) · 복지부(사회보장정보원) 연계를 통해 전국12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지원 연계('18.2월~)
3	혁신모험펀드 조성·운영방안(1.17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혁신모험펀드 내 성장지원펀드 조성·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(3월중 발표 예정) * 펀드 투자전략 등 운영방향, 혁신모험펀드-보증·대출 프로그램의 연계방안
4	취약·연체차주 부담 완화방안(1.18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체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 고시 규정변경 예고(2.9~3.20일) · 원금상환유예 시행(은행권, 2.26일) · 담보권 실행 유예 시행(2.26일)
5	금융업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(1.19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高LTV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위한 업권별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(3월~) ·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 - 기업대출간 가중치 차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등(3월~)

6	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방안(1.22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액결제업종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밴수수료율 조정 방안 마련('18년 상반기 중 확정, 7월중 시행) ·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 등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운영('18.2월~)
7	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(1.25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18년(1.1~3.2일)중 2,258억원의 사잇돌 대출 공급 (누적 공급액 1.55조원) ·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확대를 위한 여전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(3월~)
8	개인 신용 평가 체계 종합 개선방안(1.30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 등 시행 준비 중(하반기중 시행) · 신용조회회사 (CB사) 평가모형 개선 및 평가 지표 공개 확대방안 마련('18.2분기)
9	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방안(1.31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모범규준 마련 실무TF 구성 · 운영중(3월말 최종안 공개 예정) ·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(금융위 · 금감원) 구성안 마련 (3월중)
10	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(2.8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월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21억원 신규 보증 공급(신보) · 사회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(2.12일) · 사회적금융협의회 구성·운영 착수(3월중) · 신탁의 타법인 출자 허용을 위한 신탁법 개정안 입법예고(3월중)
11	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신규기구 설립(2.22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출범(2.22일) · 금융협회-재단법인 상생협력 MOU 체결(2.22일) ·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(2.26~8.31일, 6개월간)

II. 구조조정 현안 기업 관련

1. 성동조선 및 STX조선

- 채권단은 지난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처리방안을 결정(3.8일)
 - 성동조선의 경우, 산업차원의 컨설팅 등 많은 검토를 거쳤음에도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(법정관리) 신청이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
 - STX조선은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“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”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1달 내에(4.9일限)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결정
 - 고강도 자구계획으로도 STX조선의 독자생존이 쉽게 담보되지 않고 자금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,
 - 채권단과 회사측이 협력하여 사업재편(가스선 특화), 수주 노력, 유동성 관리 등 STX조선의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필요

2. 금호타이어

- 채권단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구계획에 대해, 금호타이어 노조가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에 안타까움
 - 채권단의 요구수준은 임금 및 복지제도 등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, 금호타이어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
- 또한, 채권단이 작년 매각무산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외부자본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
 -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여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

-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, 금융위와 채권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, 노조 및 회사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

3. 한국GM

- 한국GM의 경영정상화는 자동차산업, 지역경제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,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
 -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既발표된 3대 원칙*을 지키며 대응해나갈 계획
 - *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, ② 주주·채권자·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역할수행, ③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
 - 또한,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중요해져가고 있는 만큼 금융분야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산은이 해야 할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
- 현재 산은과 GM측은 실사를 공정하고 책임성 있게 진행중이며, 이 과정에 상호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

Ⅲ.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대한 입장

□ '17년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'12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

* 당기순이익(조원) : ('11)14.5 ('12)9.4 ('13)4.5 ('14)6.8 ('15)4.4 ('16)2.5 ('17)11.2

○ 다만,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
높지 않은 수준

* 수익성 지표(% , '17) : (한국) ROA 0.5, ROE 6.0 (미국) ROA 1.1 ROE 9.7

○ 수익구조의 근본적 개선 보다는 5.5조원 수준의 대손비용 감소
등이 당기순이익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지속가능성에
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

* '17년 대손비용은 7.2조원으로 '16년(12.7조원) 대비 5.5조원 절감

□ 은행권이 적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금융회사 자체
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

○ 혁신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기업
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수익을 기반으로 한
자본건전성 유지가 뒷받침 되어야 함

□ 이러한 점에서 은행권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를
문제 삼기 보다는,

○ 이익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
제대로 수행해 왔는지,

○ 소비자 편익 제고,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
기울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

□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함

* 2.6, “은행권 사회공헌활동 확대” 발표(2018년 은행연합회 중점사업계획)

○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과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면,

○ 소비자 신뢰와 함께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임

□ 최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예년에 비해 보다 과감한 사회적 책임이행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

○ 청년창업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, 채용 우수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해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

- 청년·대학생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

○ 이와 함께, 서민에 대한 보다 따뜻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음

□ 은행권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

IV.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점검계획

-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하여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
 -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
 - 다만,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,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 됨
-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
 - 이에 반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, 예대금리차는 커지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임
- '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몇 차례 개정하여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결정절차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 만큼,
 -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·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
 - 나아가,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
-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중*임
 - * 주로 절차적인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
 -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·객관성·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음
 - 아울러,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들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볼 계획